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

Basic research on decision-making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egative heritage

권영란 Kwon, Youngran  
염철호 Youm, Chirlho

( a u r i



## 주요 내용

### 기존 포지티브 헤리티지와 동일한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필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①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 비극과 관련된 유산, ② 사건당사자와 집합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의 존재, ③가치판단의 복잡성, ④보편적인 가치 개념으로 치환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라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은 특징은 포지티브 헤리티지와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며, 기존의 포지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와는 차별화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 제시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의 주요 논점 제시

#### 주요 사례를 통한 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문제점 검토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의 현안 분석 및 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②유산의 보전·활용 가치, ③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해석, ④충분한 가치 공유 기반의 의사결정 네 가지의 주요 논점 제시
- 기존 의사결정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은 ①일부 관계자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②사건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등록문화재 제도, ③유산의 조사·고증 및 해석에 대한 부주의, ④일제 잔재 보전·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⑤특정 인물·사건이 유산화 되는 것에 대한 반감, ⑥탐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⑦일방적인 유산의 보전·활용 추진 근거가 되는 등록문화재 제도로 분석됨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본방향 도출

-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을 확인하고, 기존 의사결정체계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4장에서 의사결정체계 기본방향을 도출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유산이 보전·활용에 이르렀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방식을 결정하였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



# (auri)

## 차례 CONTENTS

<b>I</b>	<b>연구의 개요</b>	<b>9</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주요 용어	17
	4. 연구의 흐름	21
<b>II</b>	<b>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b>	<b>23</b>
	1.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	23
	2.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	30
<b>III</b>	<b>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의 의사결정체계 분석</b>	<b>39</b>
	1.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 현안 검토	39
	2.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사례의 의사결정체계 분석	49
	3.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기존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61
<b>IV</b>	<b>결론</b>	<b>65</b>
	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기본 방향	65
	2. 연구 요약 및 의의	69
	3. 향후 연구과제 도출	72
	<b>참고문헌</b>	<b>74</b>
	<b>부록: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논란 관련 보도자료 조사</b>	<b>82</b>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1-2] 문화재청 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용어 사용 사례	17
[표 2-3]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의사결정과정	19
[표 2-1]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유관 용어 정리	25
[표 2-2] 다크 투어리즘 및 유관 용어 정리	28
[표 2-3]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 목록	30
[표 2-4]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 목록	32
[표 3-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 분석 결과	40
[표 3-2]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이슈(유형1)	42
[표 3-3]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이슈(유형2)	44
[표 3-4]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이슈(유형3)	47
[표 3-5]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 검토 개요	52
[표 3-6] 상암동 일본군 관사 보전·활용 논의 경과	53
[표 3-7]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 보전·활용 논의 경과	55
[표 3-8] 통영 해저터널 보전·활용 논의 경과	56
[표 3-9] 아산 박정희 별장 보전·활용 논의 경과	57
[표 3-10] 제주 이승만 별장 보전·활용 논의 경과	59
[표 3-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의 기본 방향	65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국가등록문화재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좌),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	10
[그림 1-2]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제72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족(좌)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우)	36
[그림 3-1] 문화재 등록이 보류된 상암동 일본군 관사(좌) 문화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 구 서이면사무소(우)	43
[그림 3-2] 네거티브 헤리티지 의사결정체계의 요소와 주요 논점	50
[그림 3-3] 소록도 신사의 철거-보존 논란을 보도한 카드뉴스 일부	55
[그림 3-4]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61
[그림 4-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의 기본 방향	68



##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건축유산(Architectural heritage)의 시대적 범위 확대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문화재의 시대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 도입된 ‘등록문화재 개념’은 근대문화유산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근대기를 제외해온 기존 문화재 지정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문화재의 시대적 범위를 한 차례 확대
  - 2020년 3월 발표된 문화재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6·25전쟁 및 4·19혁명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문화재 도입 이후 문화재의 시간 범위가 근대기를 넘어서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문화재청, 6·25전쟁-4·19혁명 관련 유물 올해 본격 발굴 나선다.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관련 문화재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6·25전쟁과 4·19혁명 관련 기록물 200여 건을 목록으로 만들고 참전용사 유물 등 10여 건을 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0년 3월 12일자

- 2015년 6월에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전수조사 중인 ‘역사문화자원’은 시대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음

- 건축유산의 시대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건축유산 범위에 포함
  -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제주 4·3사건, 독재정권, 그 외 재난·재해·참사 등이 발생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축유산 증가



[그림 1-1] 국가등록문화재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좌),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 검색.

### ■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개념에 주목할 필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란 부정적인 공동체 기억이 저장된 유산(Lynn meskell, 2002)으로 이때 유산이란 무형의 공동체 기억(Collective memory)을 유지하고 후세에 전달하는데 용이한 방법론(이현경, 2020: 18)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유산의 형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과 집합기억, 기억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정의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다크 헤리티지(Dark Heratage) 또는 부정적 문화유산으로도 불리며, 메스켈에 따르면, 기억의 장소로서의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교훈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문화적으로 복원될 수 없거나 국민적인 의식에 동화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제거되어 버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나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나치와 소비에트 동상이 그 예다(김미진, 2018: 5-6).

■ **국내의 경우 네거티브 건축유산의 보존·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속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사회적 논의의 대부분이 해당 유산의 보존·철거 양론에 그치고 있음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철거 관련 언론보도 자료**

- 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운명은...보존-철거 갈팡질팡 (연합뉴스 2021년 1월 27일자)
- 5·18단체 "전두환 동상 철거 등 요구 미수용시 직접 철거할 것" (뉴시스 2020년 11월 24일자)
- 철거 vs 복원 논란 '조선식산은행' 존치 (KBS 2020년 10월 7일자)
- [광복 75년] ④ 일제 유적 '철거 vs 보존' 논란...일부선 다크투어리즘 활용 (연합뉴스 2020년 8월 13일자)
- 일제강점기 소설가 '지하련' 주택, 철거냐 보존이냐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2일자)
- 친일 유적 버릴까 지킬까 (한겨레21 2020년 4월 27일자)
- 전국에 널린 일제 수탈의 유적...'보존 vs 철거' (연합뉴스 2019년 12월 11일자)

- 대표적인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인 일제강점기 건축유산의 경우 대중들에게 철거해야 하는 잔재(殘滓)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보존·활용 사업추진에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실정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부족
  -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형태적 가치 보존에만 초점을 두고, 해당 유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 방법, 피해자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결여된 경우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결과 초래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사회적 합의 형성 단계가 생략되어있는 기존 문화유산(또는 문화재)의 보존·활용 의사결정 체계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거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유산이므로 포지티브 헤리티지(Positive Heritage)와 동일한 기존의 보존·활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한계 검토 필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방법론 마련 필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경험과 불편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유산이라는 특징은 다시 말해, 해당 유산과 관련 있는 사건당사자가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수적임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존 의사결정체계와 차별화된 의사결정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필요

#### ■ 연구의 목적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을 위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 마련 필요성 검토
  - 선행연구 및 유사 정책 사업을 기반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 정립 및 특징 도출
  - 기존의 문화재/문화유산과 별도의 의사결정체계 마련의 필요성 검토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본방향 제시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사례의 의사결정 현안 분석
  -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보존·활용되는 경우 해당 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기본방향 제시

## 2. 선행연구 검토

### ■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 또는 철거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로 관련 선행연구는 ①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 및 경향 연구, ②특정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및 철거 관련 사례연구, ③다크 투어리즘 관련 연구로 구분됨
-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 및 경향 연구
  - 이현경(2018)은 보존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보존될 수 없었던 ‘근대문화유산’에 주목하여, 한국의 근대문화유산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서구의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이론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정에 불편문화유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함
  - 송석기 외(2019)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보호·관리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일제강점기 건축유산의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제안함
  - 이외에도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선행연구 중 다수의 연구들이 ‘근대문화유산’에 초점을 둔 경향을 보였는데, 정수진(2020)은 한국과 일본의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근대문화유산이 식민지 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집중하였으며, 전재호(2020)는 식민지 건축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보전·활용하는 정책 사업을 통해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개념이 변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음
- 특정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및 철거 관련 사례연구
  - 한정선(2017)은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통해 ‘부(負)의 유산’에서 ‘산업 유산’으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적 네러티브(Narrative)가 만들어지는 사회현상을 분석함

- 오은정(2020)은 패전 이후 히로시마 원폭 돔의 철거 및 보존·보수와 관련된 논쟁을 시간 순으로 조감하였으며, 이후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평화 담론과 연결되어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의 설립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인식변화 과정을 살핌
- 손은신·배정한(2018)은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사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 및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근대 역사 경관의 형성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①상징적 위치, ②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대응, ③관련 국가의 반응과 개입, ④재정적 여건, ⑤경관의 기능과 이용 방식, ⑥도시 역사 건축 정책 변화를 기준으로 근대 역사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치판단 기준을 분석함
- 김미진(2018)은 현재 역사영상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 충남금융조합연합회 회관의 장소기억이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부정적 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해 역사 고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중 다크 투어리즘 관련 연구
  - 우양호(2020)는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해방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싱가포르와 부산의 전쟁 유산과 식민지 유산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활용방향에 대해 다크 투어리즘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관광 자원화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고통의 기억에만 초점을 두는 활용방식 또한 지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장성곤·강동진(2017)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다크 투어리즘 사례를 비판하면서, 지속 가능한 다크 투어리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크 투어리즘 사례를 전수조사(146개소)하고, 이 중 5개소의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를 수행함. 연구 결과 ①관광자원: 자원의 진정성 확보와 보전, ②관광매체: 창의적인 연출과 전달, ③관광객: 자원 지향적 서비스 지원, ④지역주민: 보호주체의 밀착적 역할, ⑤관리체계: 통합적인 운영 지원 체계 구축의 5가지를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의 조건으로 검증함

■ 본 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①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 및 경향 연구, ②특정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및 철거 관련 사례연구, ③다크 투어리즘 관련 연구로 구분되며,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제 잔재’ 혹은 ‘식민지 건축’이 근대문화유산과 다크 투어리즘의 주요 대상지로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지배적임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전쟁, 학살, 재난·재해, 독재정권 및 여러 인권문제와 관련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을 고찰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및 철거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결정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 및 철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가치 공유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 과제명: 불편문화유산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 연구자(년도): 이현경(2018) - 연구목적: 한국 근대역사문화유산 속 다양한 역사성과 성격의 다층적 분석 및 해석에 대한 보완으로 불편문화유산과 관련된 핵심 이론과 쟁점을 소개하고자 함	- 문헌 조사 - 관련 사례 검토	- 불편문화유산이라는 용어 개념 및 용어의 변화 과정 조감 - 유럽·한국·동아시아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불편문화유산의 역할 고찰 - 불편문화유산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고 - 불편문화유산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쟁점 재조명
	- 과제명: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 연구자(년도): 손은신·배정환(2018)	- 문헌 및 사례 조사 - 언론보도 자료 조사	- 근대역사경관의 보존과 철거 논쟁을 살피고자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선정 - 근대역사경관의 보존 혹은 철거를 결정하는 주요 가치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연구목적: 구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사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 및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근대 역사 경관의 형성 방식을 탐구		- 근대역사경관의 상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의 동시대적 의의 검토
	- 과제명: 지속가능한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 연구자(년도): 장성곤·강동진(2017) - 연구목적: 전세계 다크 투어리즘 경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 특성 도출	- 문헌 조사 - 사례 전수 조사 - 사례 심층 조사	- 다크 투어리즘 개념 정립 - 전 세계 다크 투어리즘 대상지 146개소 전수조사 -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 구성요소 파악 -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 조건 검증
	- 과제명: 한국에서의 문화유산 개념 확장 경향과 특징 분석 :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김병섭(2018) - 연구목적: 법률에서 규정된 문화재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관련 제도 검토	- 한국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 경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살펴봄 - 기존 문화재의 개념에서 차별화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특징 분석 - 「(가칭)문화유산보호법」제시
<b>본 연구</b>	- 과제명: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 - 연구목적: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을 검토하여, 보전·활용을 위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체계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문헌 조사 - 언론보도 자료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 관련 제도 검토 - 전문가 자문	-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 및 범위 고찰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갈등 양상 분석 - 국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기억산업 사례 분석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제안

### 3. 연구의 주요 용어

#### ■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자 린 메스켈(Lynn Meskell)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 ‘부정적인 집합기억이 저장된 갈등의 장소’로 정의함(Meskell, 2002: 558)
-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현경은 ‘고통과 수치의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현재의 시점에서 ‘기념하기 어려운 장소’를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함(이현경, 2018)
-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특정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장소, 인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의 2장에서 다루고자 함
- 본 연구는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축 유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연구의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함

[표 1-2] 문화재청 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용어 사용 사례

용어	출처	관련 내용
네거티브 문화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 구 조선총독부 청사 등 네거티브 문화재의 철거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네거티브 문화재는 역사의 교훈을 삼기 위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과 치욕스런 역사의 흔적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공존 - 네거티브 문화재가 품은 역사적인 의미와 근대사적 가치 및 교육적 가치 등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하여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등록 추진
네거티브 문화유산	문화재청 50년사	- 등록문화재 제308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자: 일제강점기 말인 1945년경에 구축된 일본군 주둔시설로 일본군이 최후의 저항 거점으로 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일제 침략

용어	출처	관련 내용
		의 잔혹한 실상을 증언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유산이다.
네거티브 근대문화유산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네거티브 근대문화유산이나 개발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근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관리와 주민의 개발이익 충돌
부정적 유산	구 서이면사무소 문화재정보	- 구 서이면사무소는 전통건축이 근대기에 업무공간으로 사용된 드문 예지만 식민지행정을 증거하는 부정적 유산(Negative Heritage)으로서의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는 근대유산이다.

출처: 문화재청. (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대전: 문화재청. 155.  
 문화재청. (2014.6).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문화재청 내부자료. 31.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 50년사(자료편). 대전: 문화재청. 475  
 문화재청. (2015.4).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문화재청 내부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구서이면사무소 검색.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 의사결정체계(Decision-making system)

- 의사결정 개념은 하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의 연구를 시작으로 학술용어로 등장하였고, 사이먼의 「행정행위론」(1945) 이후 의사결정 개념과 요소가 여러 학자에 의해 재정의 됨[표 2-6] 참고
- 이때 의사결정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철현, 2001: 21)
- 사이먼 또한 의사결정의 본질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Herbert A. Simon, 1976: 154; 임석재, 1991: 53에서 재인용)

[표 2-3]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의사결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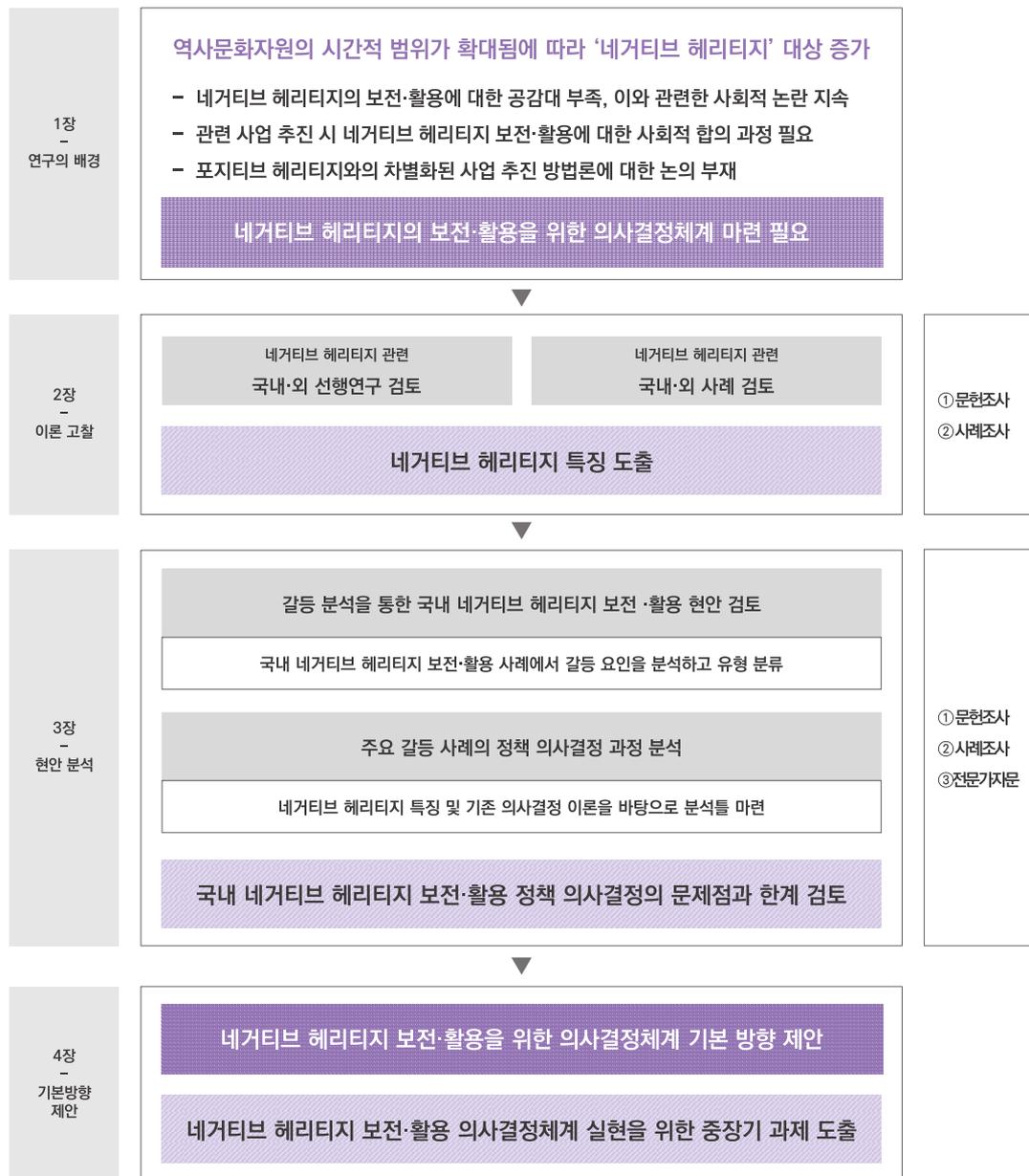
학자	의사결정과정
Simon	정보활동→설계활동→선택활동→검토활동
Griffiths	문제인식 및 제안→분석·평가→준거설정→자료수집→ 최선방안→실시
Gibson et. el	목표설정→문제확인→대안선정→대안평가→선택→실시→ 평가
Hoy and Miskel	문제인식 및 정의→문제분석→준거설정→계획수립→시행
Newman	문제의 명료화→대안선정→자료수집→자료분석→의사결정
Umstatted	문제인식→정보수집분석→정보의 조직→해결방안 설정→취약적 방안의 제거→해결방안
Kaufman	문제진단→대안창출→전략수립→시행→효과분석
Dewey	필요인식→문제확인→해결방안설정→가설설정→정교화→확증
Dill	의제작성→탐색→공약→이행→평가

출처: 신중식, 1992. 현대교육행정학. 서울: 교육출판사. p.259,의 내용을 장준영, 2005. 교사들의 학교경영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유형에 따른 장학실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에서 재인용

-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행정의사결정이란 주로 정책과 관련한 것으로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모두를 의미함(정철현, 2001; 22)
-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이란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대상선정에서부터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보전·활용 계획, 예산투입과 사업 실행까지 전(全)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최선의 대안이란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산에 대한 건축적·역사적 가치, 공동체 기억, 미래 세대에 전달할 교훈 등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논의하여 유산의 보전·활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4. 연구의 흐름



[그림 1-2] 연구흐름도



## II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

### 1.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

####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등장 배경과 의미

- 기억 호황 현상(Memory Boom)에 따른 기억 상속 방법론의 등장
  - 20세기 후반 유럽에 기억 호황 현상이 만연하면서, 제1·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Huyssen, 1995), ‘무형의 기억’을 ‘유형의 유산’의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공동체 기억(Collective memory)을 유지하고, 후세에 전달하는데 용이하다는 결론에 도달함(이현경, 2020: 18)
  - 더불어 1979년 6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Auschwitz Birkenau)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이 보편화됨(김미진, 2018: 5)
- 잔재(殘滓)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식 전환
  -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관련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할 잔재에서 후세에 보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식 전환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됨
  - 해방 직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자원 부족이라는 국내 사정에 따라 식민지 건축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국민 대부분에게 식민지 건축은 청산해야 하는 굴욕의 유산으로 인식됨(전재호, 2020: 109)
  - 이후 ‘구 조선총독부 철거’와 관련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일제강점기 건축물의 보전·활용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과 동시에 식민지 건축을 유산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됨

## ■ 선행연구를 통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용어의 의미와 범주

- 네거티브 헤리티지 용어 고찰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부정적인’, ‘나쁜’, ‘거부’, ‘비관적인’의 의미를 가지는 네거티브(negative)와 유산(heritage)의 합성어로 해당 유산이 어떤 역사적 사실과 장소, 집합 기억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따라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주가 상이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을 정립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의미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함
- 국외 연구: 용어의 세분화, 해당 유산이 동시대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
  - 유럽의 문화유산학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시기’ 중심이 아니라, 제1차·2차 세계대전, 대학살, 각종 내전, 식민지 탄압 등 인류에 상처와 고통을 남긴 개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분류하는 것이 특징임(이현경, 2018: 164)
  - 개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유산을 분류하는 경향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의 기억에 따라 해당 유산을 지칭하는 용어가 세분화되는 특징이 있음
  - 또한, 국외 연구에서 나타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유사 용어는 해당 유산이 동시대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예컨대 불화 문화유산(Dissonant heritage)은 잔혹한 역사적 현상이 문화유산이 될 때 동시대의 사람들 간에 겪는 사회·정치적 불협화음에 초점을 두었으며, 상처의 문화유산(Heritage that hurts)은 부정적 기억 중에서도 대중들의 상처, 아픈 감정이 녹아있는 장소를 의미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관통하여 정리한 이현경의 연구에서는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이라는 용어에 주목함
  - 불편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역사적 사건(과거)뿐만 아니라, 해당 유산에 대해 어렵

고 기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시대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와 공동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분쟁을 통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현경, 2018: 172)

- 국내 연구: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 중심의 용어
  -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일제식민,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같이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negative)을 중심으로 용어가 형성됨
  - 이와 같이 사건 중심의 용어 형성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범위와 사례를 설정하는 데 유의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유산’의 경우 일제 통치/수탈과 관련한 네거티브 헤리티지뿐만 아니라, 항일·독립운동 및 그 외 근대 일상사와 관련한 유산이 포함되어 있음
  - 예컨대 송석기 외(2019)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형성 유산(건축물)’의 범위는 ①일본 제국에 의해 형성된 유산, ②한국인에 의해 형성된 유산, ③선교사 등 외국인에 의해 형성된 유산으로 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송석기 외, 2019: 75)

[표 2-1]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유관 용어 정리

용어	학자	내용
Dissonant heritage	Tunbridge and Ashworth(1996)	- 잔혹한 역사 현장이 문화유산화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정치적 불협화음에 강조를 둔 용어
Unwelcomed heritage	Ashworth and Ashworth(1998)	- 가난과 고통이 담긴 기억의 장소
Heritage that hurts	Uzzell and Ballantyne(1998)	- 사람들의 아픈 감정이 녹아든 상처 입은 장소
Negative heritage	Meskell(2002)	-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갈등의 장소
Undesirable heritage	MacDonald(2006)	- 대다수 사람이 거부하는 물질문화
Difficult heritage	Logan and Reeves(2008)	- 국가 또는 공동체의 고통과 수치의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장소

용어	학자	내용
	MacDonald(2009)	- 현재의 공동체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장소
	이현경(2018)	- 고통과 수치의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과거에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장소들이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재의 상황에서 기념하기 어려운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연결시킴 - 해당 유산이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분쟁을 통칭
(Armed) Conflict heritage	Sorensen and Viejo Rose(2015)	- 무력 분쟁 지역에서 파괴되고 재건되는 장소
Dark heritage	Lennon and Foley(2000)	- 죽음과 재해의 현장
負の遺産(부의 유산)	関西学院大学(2000)	- 전쟁이나 학살 등 인류가 저지른 잘못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산
식민지 건축 유산	전재호(2020)	-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건설된 것 - 식민통치의 억압성과 군국주의를 상징했던 행정기관, 경찰관서, 신사, 기념비, 공덕비 등
태평양 전쟁 유적	이세훈(2018)	-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구축한 시설물
	이현준·김왕직(2016)	- 태평양전쟁 중 한반도 전역에 설치된 전쟁기지
한국전쟁(군사)유적	조태환·김태영(2018)	-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흔적으로 현존하는 전적지와 각종 전쟁관련 시설물

출처: 해외 선행연구의 용어 정리는 이현경. (2018). 불평문화유산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20. 169.에서 인용  
 전재호. (2020).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 민족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36(3), 101-131.  
 이세훈. (2018). 제주 지역 태평양전쟁 유적의 부존 및 활용방안,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이현준·김왕직. (2016). 도서지역 태평양전쟁유적의 유형별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추계). 181-188.  
 조태환·김태영. (2018). 한국 전쟁 군사유적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중부접경지역(연천군, 철원군, 화천군)을 중심으로-. 농촌건축, 20(3), 47-56.

■ 다크 투어리즘 및 유관 용어의 의미와 범주

- 본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와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개념 고찰 및 선행연구 조사를 함께 수행함
- 다크 투어리즘이란 재난 지역이나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여행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됨
- 국립국어원은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 ‘재난 지역이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곳을 돌아다니며 교훈을 얻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역사교훈여행’<sup>1)</sup>으로 용어를 순화함
- 주목할 점은 용어가 국문으로 순화되면서 단순히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을 통해 교훈을 얻는 추가적인 행위가 포함됨
-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크 투어리즘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DMZ 투어(한국전쟁), 칠곡 다크 투어(한국전쟁), 망우리 공동묘지 투어(묘지시설, 독립운동가 및 근대 유명인사의 묘소)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기억의 대상지를 보전·정비하여 관광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두 번째로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한국전쟁),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의 장소와는 무관하지만, 해당 사건을 테마로 관광대사지를 조성한 경우가 있음(강동진·배연한, 2017: 64)
- 전자의 경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일지라도 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볼 수 없으며, 후자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 및 역사적 장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일부로 볼 수 없음
- 다크 투어리즘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은 기억산업(Memory Industry), 장소기억(Place Memory), 기억 경관(Landscape of Memory), 트라우마 공간(Trauma) 등의 용어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국립국어원, 다크 투어리즘 검색.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761527&sense\\_no=828613&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761527&sense_no=828613&viewType=confirm)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표 2-2] 다크 투어리즘 및 유관 용어 정리

용어	학자	내용
Dark heritage/tourism	Lennon and Foley(2000)	- 죽음과 재해의 현장 - 다크 투어리즘의 형태를 ①전쟁의 상흔, ② 묘지 방문, ③식민유산, ④대량학살유적, ⑤재난지역답사, ⑥감옥관람으로 분류함
역사교훈여행	국립국어원	- 재난 지역이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곳을 돌며 교훈을 얻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한숙영·조광익(2010)	-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위험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현상 - 근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매스미디어 기술 발달의 산물
	장성곤·강동진(2017)	- 죽음과 고통 관련 장소를 여행하는 관광 - 문화유산관광과 순례관광의 성격을 지지며, 죽음과 재난, 고통 등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 하여 올바른 인식 제공과 교훈을 얻는 활동 - Lennon and Foley(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사정을 결합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형태를 ①전쟁, ②항쟁·항거, ③학살, ④노동역사, ⑤재난·재해, ⑥격리·수용, ⑦ 공포, ⑧장으로 분류함
	우양호(2020)	- 여행이나 관광을 통해 인간에 의해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행위
블랙 투어리즘		- 어두운 면을 보거나 애도를 하는 관광
기억 산업	한지은(2015)	- 기억의 상품화 및 관광자원화 현상 - 최근 전쟁, 재난, 학살 등 고통스런 기억의 장소들이 대중매체에서 콘텐츠로 활용되고 상업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 변모하는 사례가 증가(예: 다크 투어리즘)
	전진성(2005)	
	Gary Cross(2015)	- 과거에 대한 추억이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경향 포함(예: 노스텔지어, 레트로, 뉴트로)
트라우마(공간/장소)	Dylan Trigg(2009)	- 트라우마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트라우마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용어	학자	내용
기억의 공간	Aleida Assmann (2009)	-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한 중요 기억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문화적 기억으로 번역되고 기록된 공간
기억의 경관	손은신(2021)	- 경관은 가장 비물질적인 기억의 장소이며, 도시 공간에서 기억의 이미지가 시각화된 대상이자 특정 기억을 경험 가능한 공간 범위

출처: Lennon and Foley(2000)의 용어 정리는 이현경. (2018). 불편문화유산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20. 169.에서 인용  
 국립국어원, 다크 투어리즘 검색.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761527&sense\\_no=828613&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761527&sense_no=828613&viewType=confirm)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한숙영·조광익. (2010). 현대사회에서 위험과 관광. 관광학연구, 34(9). 11-31.  
 장성곤·강동진. (2017).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2). 63-80.  
 우양호. (2020).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53-83.  
 한지은. (2015). 전장에서 관광지로-동아시아의 기억산업. 문화역사지리, 27(2). 55-78.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20.  
 Gary Cross. (2015). Consumed Nostalgia: Memory in the age of Fast Capit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Dylan Trigg. (2009). The Place of Trauma: Memory, Hauntings, and the Temporality of Ruins, Memory Studies 2(1): 87-101.  
 Aleida Assmann. (2009).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4th edition, Munchen: Verlag C.H.Beck oHG, 변학수·채연숙 옮김(2011)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손은신. (2021).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

### ■ 선행연구를 통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대상지 분석

- 분석개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참혹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단순히 시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유산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유사 용어로 제시되는 사례를 조사하고자 함
  - 본 과정에서 정리된 국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시기, 장소 및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대중들의 감정을 바탕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
  -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경우 세계대전과 관련한 전쟁유적과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Holocaust) 관련 유적들이 많았음
  - 이 외에도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에서 식민국을 위해 건설된 여러 시설물, 노예제도·강제노역과 관련된 시설물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소개됨

[표 2-3]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 목록

구분	사례(국가)	관련 사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폴란드)	홀로코스트
	바르샤바 역사지구(폴란드)	제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원폭돔(일본)	제2차 세계대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일본)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역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마셜제도)	냉전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구분	사례(국가)	관련 사건
	고레 섬(세네갈)	강제노역, 노예제도
	르몽 문화경관(모리셔스)	노예, 유배자 도피 거주지
	발롱구 두부 고고유적(브라질)	노예제도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호주)	사회부적격자 수용
	로벤 섬(남아프리카)	사회부적격자 수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난징 대학살 기록물(중국)	학살
	안네 프랑크의 일기(네덜란드)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증언의 페이지 컬렉션, 야드바셈 예루살렘(이스라엘)	홀로코스트
	투올슬렝 학살 박물관 기록물(캄보디아)	교도소, 고문 및 학살
	마이즈루 향으로의 귀환-일본인 억류 및 송환에 관한 문서(일본)	강제노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노르망디상륙작전유산	
	일본사도섬 금·은광유적	
	아구아 데 디오스(콜롬비아)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나가시마 섬(일본)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뤼 성(타이완)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성 조르겐 병원(노르웨이)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칼라우파파(미국)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하얼빈731생체실험부대 주둔지	식민지 군사기지, 생체실험
그 외	체르노빌 원전사고지 일대	재난, 재해
	실로소 요새(싱가포르)	식민지 군사기지
	포트캐닝파크(싱가포르)	식민지 군사기지

출처: 강동진. (2020). 근대기 세계유산에 대한 판단.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서울:(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97-131.

우양호. (2020).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53-83.

이민경. (2020).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정적 문화유산과 다크 투어리즘의 기억-태즈메이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0(43), 193-230.

이현경. (2020). 과정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서울:(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3-41.

장성곤·강동진. (2017).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2), 63-80.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

- 국내의 경우 일제강점기 수탈과 관련된 시설, 식민통치 행정기관, 군사시설 등이 많았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학살 및 가난과 기근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 등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선행연구에 소개됨
- 이 외에도 최근 문화재청에서 태평양전쟁 및 한국전쟁<sup>2)</sup> 관련 유적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

[표 2-4]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 목록

구분	사례	관련 사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 (한국 외 8개국 14개 단체)	일제강점,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피란수도 부산 유산(조건부)	6·25 전쟁
사적	옛 서대문형무소	감옥시설
	옛 서울역사	일제강점 수탈
기념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일제강점 수탈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일제강점 수탈
등록문화재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 창고	일제강점 수탈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일제강점 수탈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일제강점 수탈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일제강점 수탈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일제강점 수탈
	뜯 다리 부두	일제강점 수탈
	상주농협협동조합 옛 창고	일제강점 수탈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	일제강점 수탈
	정읍 신태인 옛 도정공장 창고	일제강점 수탈
	익산 주현동 옛 일본인 농장 사무실	일제강점 수탈
	영양 옛 용화광산 선광장	일제강점 강제노역

2)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용역(2016), 근현대문화유산 6·25전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2020)

구분	사례	관련 사건
등록문화재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한국전쟁, 학살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식민통치 종교시설
	구 서울특별시청사	식민통치 행정기관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식민통치 군사시설
그 외	소록도(한센병 특수시설군)	한센병 강제격리 수용 시설
	조선총독부	식민통치 행정기관
	구 조선총독부 체신청(우체국) 청사	식민통치 행정기관
	상암동 일본군 관사	식민통치 군사시설
	구 서이면사무소	식민통치 행정기관
	제주 4.3 관련 유적지	학살
	국내 태평양 전쟁 관련 유적지	일제강점 군사시설, 강제노역

출처: 강동진. (2020). 근대기 세계유산에 대한 판단.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서울:(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97-131.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일본군 관사도 문화재?. 2012년 10월 22일자.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우양호. (2020). 동아시아 해방도시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53-83.

이세훈. (2018). 제주 지역 태평양전쟁 유적의 부존 및 활용방안,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이현경. (2020). 과정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서울:(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3-41.

##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

-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 비극과 관련된 건축 유산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집단의식 중에 부정적인 기억의 저장소(김미진, 2018; 5)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거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 유산임
  - 국내 사례의 경우 많은 유산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식민통치·수탈과 관련 시설들이며, 그 외 한국 전쟁,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건축물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분류됨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조성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인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보존 가치가 크며, 희소성이 클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적인 문화재 가치 기준과는 상이하다는 시사점이 있음
  - 강동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에서는 후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는 의미<sup>3)</sup>가 큰 것으로 보임(강동진·배연한, 2017; 57)



### ※세계유산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sup>4)</sup>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는 주요 사건,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예술 및 문학 작품 등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나치 독일(1933~1945)이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증거이며, 인간성에 반하여 자행된 범죄 행위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다. (중략) 이 유적은 유대인 대학살, 인종차별 정책, 인간의 야만성을 전 인류에게 상기시키는 주요 장소이다. 또한 인류 역사의 어두운 한때에 관한 기억이 모여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곳이자, 과격한 사상이나 인간 존엄성 부정이 가져올 수많은 위협과 비극에 대한 경고의 장이기도 하다.

3)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이유는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비록 불행한 역사이지만 국제적인 화해와 평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동진·배연한, 2017; 57)

4) 사진 및 텍스트 출처: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 검색. <https://heritage.unesco.or.kr/%ec%95%84%ec%9a%b0%ec%8a%88%eb%b9%84%ec%b8%a0-%eb%b9%84%eb%a5%b4%ec%bc%80%eb%82%98%ec%9a%b0-%eb%8f%85%ec>

- 다만,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조성된 건축 유산이라는 특징은 근대문화유산의 보편적인 특징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근대기’ 전반에 조성된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대상이 되지만,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경우 특정 시기가 아닌 개별 역사적 사건과 연관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비극에 대한 ‘경험,’ ‘감정,’ 또는 ‘기억’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지어진 왜성은 현재 임진왜란을 경험한 사람이나, 이와 관련한 감정 또는 기억이 소멸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과거에 만들어진 유산으로 해당 유산을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인식하거나, 철거되어야 할 잔재로 인식하지 않음

---

[%9d%bc-%eb%82%98%ec%b9%98-%ea%b0%95%ec%a0%9c-%ec%88%98%ec%9a%a9%ec%86%8c-%eb%b0%8f/](#) (검색일: 2021.05.23.)

-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비극의 당사자와 집합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의 존재
  -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 중심의 건축유산이라는 점은 다시 말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건당사자가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사건당사자의 경험이나 기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건당사자로부터 감정적 충격(trauma)를 불러일으킨다면, 더 이상 유산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임<sup>5)</sup>



[그림 2-1] 제72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족(좌)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우)

출처: 뉴스원.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3주만에 5132명 접수. 2021년 1월 31일자.  
경향신문. 위안부 문제, 내가 매듭짓고 싶어. 2021년 2월 16일자.  
(모든 기사의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5) 해당 특징은 이현경의 자문회의(2021.5.28.) 발언을 인용하였음

- 가치판단의 복잡성
  - 네거티브 헤리티지와 관련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국가적·정치적·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은 특징은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대상으로 여러 갈래의 가치평가가 나올 수 있으며, 해당 유산에 대한 가치판단이 복잡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유산의 경우 ‘선 갈등 해소·후 등재 추진’이라는 원칙을 세우기도 함(강동진·배연한, 2017: 57)
  - 예컨대 국내에서는 군함도로 잘 알려진 일본 하시마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23개소 중 하나로 일본의 산업화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설명되고 있어 역사 왜곡의 논란의 대상이 됨
  - 특히 강제 징용에 대한 사실을 명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역사적 진실 규명에 대한 논란이 있음



※군함도(軍艦島, はしま)<sup>6)</sup>

일본에게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철강, 조선 및 탄광 산업의 발전상과 일본이 이룬 급속한 산업화를 증언하는 유산이자, 서구의 산업화가 비서구권으로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고 여겨진 최초의 사례로 설명된다(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 검색.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 정리하자면,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유산을 바라보는 사람의 국가, 성별, 종교, 출신지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해당 유산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포지티브 헤리티지로 인식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6) 사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군함도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498&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1.5.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498&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1.5.1.))

- 보편적인 가치 개념으로 치환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사례
  - 마지막 특징은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역사적 비극과 불편한 기억과 관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보존·활용되는 경우 전쟁, 식민 지배, 학살, 재난, 재해와 같이 유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과 갈등 요소들이 반성, 희망, 평화, 민주주의, 애도와 추모 등의 가치 개념으로 치환되는 경향을 보임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주의-독재정권)

민주인권기념관은 공권력의 고문 시설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보존하고, 전시와 교육 시설을 더하여 아픔을 기억하며,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념시설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시민의 힘을 모아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 손은신의 연구(2021)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경관에 대해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추모하는 직접적인 매체임과 동시에 슬픔에 대한 추모 방식과 태도를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함
- 트라우마 기억을 다룬 경관은 어떤 사건으로 인한 상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재현하는 동시에 트라우마 기억을 회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여 위로할 수 있는 '양가적 특성'을 가짐(손은신, 2021; 75)

7) 사진 및 텍스트 출처: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기념관 소개 페이지. <https://dhrm.or.kr/intro> (검색일: 2021.02.21.)

## III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의 의사결정체계 분석

### 1.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 현안 검토

#### ■ 사례 분석 개요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과 관련된 사례 전반을 조사함
-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의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등록문화재와 같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전·활용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논의 주체를 살펴봄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의사결정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갈등 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검색하여 내용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사례별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보전·활용 사업추진 경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연구자료, 문화재청 내부자료 등을 검토함

#### ■ 사례 분석 결과

- 조사 결과 많은 사례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문화재로 지정·등록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사례 분석 결과 ①유산에 대한 조사·고증 및 해석과 관련한 문제, ②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 ③일방적인 보전·활용 결정 방식 세 가지의 이슈로 정리할 수 있음

[표 3-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사례 분석 결과

건립 시기	명칭	유형	갈등 구조	분석 결과		
				조사·고증 및 해석	보존·활용 가치 공감	일방적인 결정방식
1914	구 서이면사무소	업무시설	경기도 ↔안양시·지역주민		●	
1925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업무시설	부산시·문화재청 ↔부산시민	●	○	
1930년대	상암동 일본군 관사	주거시설	문화재청·SH공사 ↔지역주민		●	○
1932	통영 해저터널	기반시설	문화재청 ↔지역 역사학계	●		
1933	통영 문화동 배수시설	기반시설	문화재청 ↔통영시		●	
1935	고흥 구 소록도 갯생원 신사	종교시설	문화재청 ↔국민		●	
1938	인천 부윤관사	주거시설	대립구조 없음	●		
1941	부산 송정역	기반시설	문화재청 ↔송정동 주민		●	
1943	구 통영군청	업무시설	문화재청 ↔통영시		○	●
1958	제주 이승만 별장	주거시설	제주시 ↔4·3유족, 도의회		○	●
1977	아산 박정희 별장	주거시설	아산시·일부 주민 ↔일부 주민		●	

출처: 연구진 작성

■ 유산에 대한 조사·고증 및 해석과 관련한 문제

- 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역사 고증 미흡한 경우
  -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역사 고증이 미흡한 경우 해당 유산의 보존·활용 단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됨
  -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와 관련된 참혹한 역사적 사건과 사건 관계자의 의견, 해당 유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보존·활용 단계에 이르는 것은 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워짐
  - 대표적인 예로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국가등록문화재 제87호), 통영 해저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201호), 부산 나병원 기념비(국가등록문화재 제781호), 인천 부윤관사(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실패),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심의단계에서 등록 가결) 등이 있음
-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 제기
  - 특히, 통영 해저터널의 경우 당초 문화재청에서 ‘통영태합굴 해저 도로’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칭인 ‘태합’이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여 문화재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통영사연구회의 지적이 있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통영 해저터널’로 명칭을 변경한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사례가 있음



※ 「통영해저터널」 문화재 등록예고 명칭과 관련하여<sup>8)</sup>

문화재청은 경남 통영시 「통영해저터널」을 근대문화유산 등록예고 기간에 「통영태합굴」이란 가(假)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문화재 등록예고시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8.11(목) 17:00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소위원회를 긴급소집하여 등록예고 가(假)명칭인 “통영 태합굴 해저도로”에 대해 등록 예고기간인 7.12부터 8.10일까지 국민들의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불리어지고 있는 『통영해저터널』로 부여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표 3-2]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이슈(유형1)

명칭	개요	논의 내용
국가등록문화재 제201호 통영 해저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통영시, 지역 역사학계</li> <li>- 명칭변경 이슈</li> <li>- 일제강점기 야마구치 통영군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에게 전멸당한 일본군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해저터널 공사를 착공. 이때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영시·지역 역사학계 의견:</b> 통영 해저터널을 일본식 표현인 통영태합굴(統營太閤窟) 해저도로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합함. 이에 통영시연구회는 '통영해저터널'로 명칭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 송부</li> <li>- *태합(太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칭(敬稱)</li> </ul>
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문화재청↔부산시민</li> <li>- 등록문화재 등록 반대</li> <li>- 조사 미흡으로 인한 명칭변경 이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민 의견:</b> 부산 옛 법조청사(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일제수탈의 본거지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발상</li> <li>- <b>문화재청·현장조사 전문가 의견:</b>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후세에 일제 잔재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로서 미적가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li> </ul>
인천 부윤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li> <li>- 시 지정문화재 추진 실패</li> <li>- 인천 부윤관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에 대해 찬반양론이 펼쳐진 사례는 아니나, 고증 미흡으로 인해 보존되지 못한 사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윤관사는 지방 최고위 관리인 부윤이 살았던 주택인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1966년 시장 관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인천시장 관사로 쓰임</li> <li>- 인천시립박물관 등 전문가들의 고증이 진행되면서 이 건물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부윤이 살았다는 자료가 확인됨</li> <li>- 시 관계자는 "일본인 부윤이 살았고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증이 마무리되면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8) 문화재청 보도자료. 「통영해저터널」 문화재 등록예고 명칭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11일자.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80063613&sectionId=e\\_sec\\_1&mn=NS\\_01\\_02](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80063613&sectionId=e_sec_1&mn=NS_01_02) (검색일: 2021.02.21.)

■ 해당 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일제 잔재 보전·활용에 대한 대국민적 반감
  -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건축물 중 일제 수탈, 민족성 말살을 위해 조성된 시설, 친일파 소유 건축물, 그 외 적산가옥 등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로서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남
  - 상암동 일본군 관사(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실패),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국가등록문화재 제71호), 구 서이면 사무소(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최남선 고택(시·도문화재 지정 실패), 통영 문화동 배수시설(국가등록문화재 제150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 구 통영군청(국가등록문화재 제149호) 등이 그 예임



[그림 3-1] 문화재 등록이 보류된 상암동 일본군 관사(좌)  
문화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 구 서이면사무소(우)

출처: 서울경제, [역사의 향기] <96> 상암동 일본군 관사, 2015년 3월 25일자.  
경인일보, 안양 구(舊) 서이면사무소, 경기도문화재자료 현재 지위 유지, 2020년 10월 30일자.

- 일제 식민지기 건축을 청산해야 할 잔재로 인식하고, 유산으로서 보전·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경우 문화재청 또는 관할 지자체의 일관적인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의 ‘일제 잔재의 무조건적인 철거 보다 후세에 남길 교훈을 보전해야 한다.’는 반복되는 주장<sup>9)</sup>으로는 일제강점에 대한 대국민적 반감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해야만 하는 가치 발굴·공유가 중요할 것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공동체간 합의형성 실패
  - 다음으로 아산 박정희 별장과 같이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가치에 대한 지역 공동체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음
  - 대국민적 반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한 일제강점기 유산과 달리, 이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양분되는 경향이 특징임

[표 3-3]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이슈(유형2)

명칭	개요	논의 내용
<b>세부 유형 1: 일제 잔재 보존·활용에 대한 대국민적 반감</b>		
상암동 일본군 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SH공사↔지역주민</li> <li>-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실패</li> <li>- 1930년대 초 건축된 장교용 단독 관사. 이러한 유형의 관사는 국내에 유일함.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조선 또한 본격적인 전시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당시 조선인 강제 징용·징병 및 위안부가 동원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갈등 개요:</b> 2005년 상암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상암동 일본군 관사는 2008년부터 약 2년간 2개동(총 22개동)을 이축한 후 2012년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실패함</li> <li>- <b>주민 의견:</b>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의 흔적을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 보존할 필요가 없음. 관사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일본인학교 학생들에게 일제침략에 대한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음</li> <li>- <b>문화재청 의견:</b> 일제와 관련된 근대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항상 있어왔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운 역사의 잔재 또한 역사적 교훈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li> </ul>
국가등록문화재 제71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국민</li> <li>- 등록문화재 등록 이후 문제제기</li> <li>- 고흥 소록도에 위치한 신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병 환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지어진 신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갈등 개요:</b> 2004년 2월 국가등록문화재 제71호로 등록되었지만, 추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소록도에 국내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한 일본 신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존폐논란이 발생</li> </ul>

9) 광주방송. 2018년 3월 1일자; 뉴시스. 2016년 6월 1일자; 대전일보. 2009년 1월 16일자; 연합뉴스. 2002년 8월 6일자;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등

명칭	개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중 의견:</b> 조선총독에 의해 소록도로 강제 이주된 한센병 환자들에게 참배를 강요한 장소로, 세금을 투입하여 보존·정비를 할 수 없음</li> <li>- <b>문화재청 의견:</b> 일제강점기 동안 국내에 1,000여 개가 넘게 세워졌지만, 2004년 당시 소록도 내에 위치한 신사만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려는 의도로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함</li> </ul>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 구 서이면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안양시, 지역주민</li> <li>- 도문화재자료 지정 취소 요구</li> <li>- 구 서이면사무소는 전통건축이 근대기에 업무공간으로 사용된 드문 예. 1917년에 이축 시에 지은 상량문에 ‘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 절을 만나 보를 올린다’는 기록이 있어 일제 통치를 찬양한 건물로 평가되는 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양시·지역주민 의견:</b> 친일문화재를 보전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주민들의 재산권과 상권침해가 발생함</li> <li>- <b>경기도·도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b> 일제강점기 행정관청 대다수가 조적조, 일본식 목조로 건축된 것과 달리, 전통 한옥을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이고, 유사 사례 중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서이면사무소는 일제수탈의 현장으로 보전하여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li> </ul>
국가등록문화재 제150호 통영 문화동 배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통영시</li> <li>- 등록문화재 등록 반대</li> <li>- 문화동 배수시설은 일제강점기 조선 침탈을 위한 기반시설로 조성됨. 현재 시멘트로 덧칠되어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배수지 출입 시설물 상부에 일본 왕을 찬양하는 “천록영창(天祿永昌)”이라는 글귀가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영시 의견:</b> 문화동 배수시설 건물은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이 서려 있는 이 곳에 민족혼을 꺾기 위해 배수지를 만들고 그 위에 왜색이 짙게 축조한 것이어서 문화재 등록은 있을 수 없음</li> <li>- <b>문화재청 의견:</b>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근대기 건축 양식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li> </ul>
국가등록문화재 제302호 부산 송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송정동 주민</li> <li>- 등록문화재 말소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민 의견:</b> 송정역은 일제강점 당시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어 지어진 건물로 조선 물자를 수탈하는 창구로 쓰인 만큼 문화재로 기념할만한 건</li> </ul>

명칭	개요	논의 내용
		축물이 아님 - <b>문화재청 의견:</b> 송정역사가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지만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수탈의 창구로 쓰였던 것 자체가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 또 송정역사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930~40년대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도 인정할 수 있음
<b>세부 유형 2: 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동체간 합의형성 실패</b>		
아산 박정희 별장	- 아산시·일부 주민↔일부 주민 -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실패	- <b>문화재 등록 찬성 의견:</b>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목욕을 했던 별장에 대해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 “별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사용하던 침구, TV, 자조정신 친필 휘호, 책, 하사품 등 유품 100여점과 가족사진 등 70여점이 보관돼 있다”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 - <b>문화재 등록 반대 의견:</b> 고 박 전 대통령 우상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함

출처: 연합뉴스. '친일 잔재' 안양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존치 놓고 이견. 2018년 8월 14일자.  
 매일경제. 통영시, 일제때 건물 문화유산 등록 반발. 2005년 2월 24일자.  
 부산일보. 일제 잔재 논란 '옛 송정역' 문화재 유지. 2014년 5월 13일자.  
 뉴시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산 별장 충남도 문화재 지정해야". 2016년 6월 1일자.  
 위 기사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모든 기사의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 일방적인 보전·활용 결정방식

- 지자체의 계획사항에 대해 중앙부처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중앙부처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결정한 경우 지자체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마찰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음
  -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등록문화재 제149호인 구 통영군청이 있음
- 사건 관계자와 논의 없이 보전·활용을 결정한 경우
  - 이 유형은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가진 특징 중 하나인 ‘사건당사자와 집합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이 존재’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됨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산과 관계있는 역사적 비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 갈등 발생
  -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제주 이승만 별장(국가등록문화재 제113호)이 있음

[표 3-4]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이슈(유형3)

명칭	개요	논의 내용
세부 유형 1: 지자체의 계획사항에 대해 중앙부처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가등록문화재 제149호 구 통영군청	- 문화재청↔통영시	- <b>통영시 의견:</b> 구 통영군청 건물은 노후화가 상당하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존치할 이유가 없음.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재건축 또는 매각할 방침이어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 - <b>문화재청 의견:</b> 비록 일제시대의 것이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근대기 건축 양식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명칭	개요	논의 내용
<b>세부 유형 2: 부정적 사건 관계자와 논의 없이 결정한 경우</b>		
국가등록문화재 제113호 제주 이승만 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4·3유족회</li> <li>- 유산의 정비·활용 사업추진 중단</li> <li>- 노후화된 이승만 별장을 기념관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4·3유족회의 강력 반발로 사업추진을 중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시 의견:</b> 구조안전진단 결과 D 등급에 해당하는 이승만 별장은 보수·보강이 시급. 이에 소유주인 (주)제주축산개발 측과 재정비 협의 중. 별장 재정비 용역을 바탕으로 별장 보수·보강 및 기반시설 정비(10억원), 기념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자 계획함</li> <li>- <b>유족회 의견:</b> 이승만 별장을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것은 도민정서와 맞지 않음. 4·3관련 예산은 줄어가는데 상황에서 별장을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데 세금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제주도의회</li> <li>- 유산의 정비·활용 반대</li> <li>- 제주시는 처음 별장 부지에 기념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4·3유족회 등 일부의 반발에 따라 원형보수로 사업규모를 축소함(2억4600만원). 하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인해 보수공사 어려워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시 의견:</b> 별장의 마룻바닥이 기둥이 썩는 등 폐가처럼 변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함.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만나 귀빈사의 독특한 건축양식 등을 잘 설명한 뒤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자 함</li> <li>- <b>도의회 의견:</b> 4·3사건으로 도민들에게 참혹한 상처를 준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을 보수하기 위해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4·3사건 유족들이 수용하지 못할 것</li> </ul>

출처: 매일경제. 통영시, 일제때 건물 문화유산 등록 반발. 2005년 2월 24일자.

국민일보. 국가문화재 '이승만 별장' 어찌나... 제주도의회 보수 예산 삭둑. 2012년 1월 2일자.

위 기사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모든 기사의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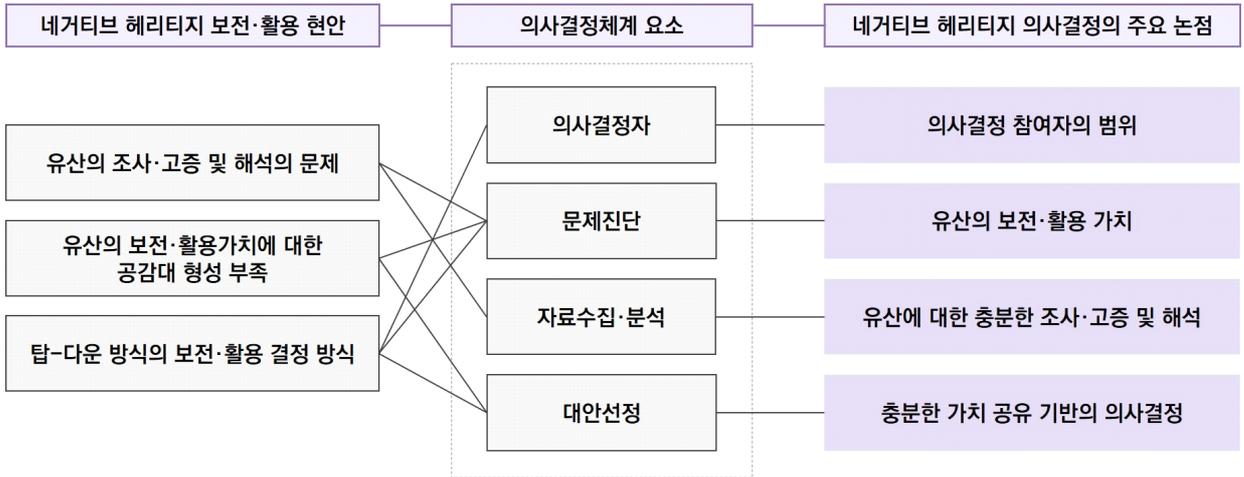
## 2.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사례의 의사결정체계 분석

###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목적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개념
  -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이란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대상선정에서부터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보전·활용 계획, 예산투입과 사업 실행까지 전(全)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최선의 대안이란 무조건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목적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목적은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함에 있어서 보존-철폐에 초점을 둔 이원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해당 유산에 대한 건축적·역사적 가치, 공동체 기억, 미래 세대에 전달할 교훈 등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함

###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주요 논점

- 의사결정체계의 방향성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의 현안 분석 및 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를 ‘의사결정자,’ ‘문제진단(인식),’ ‘자료수집·분석’ 및 ‘대안 선정’ 4가지로 정리함
  - 다음으로 의사결정 요소를 다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 및 보전·활용 사례에서 나타난 갈등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네 가지 의사결정의 주요 논점을 도출함



[그림 3-2] 네거티브 헤리티지 의사결정체계의 요소와 주요 논점

출처: 연구진 작성

•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건 당사자가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음
- 해당 건축물이 사건당사자의 감정적 충격을 불러일으킨다면 유산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 또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 따라서 네거티브 건축유산의 보전·활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와 공동체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유산의 보전 가치를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보전·활용되는 경우 보편적인 가치 개념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가치 도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과 해석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가치 평가는 해당 유산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와 연구·고증 과정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는 의사결정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조사·연구·고증은 건축유산으로서 물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 사건당사자의 유무, 해당 사건이 동시대에 미치는 영향 등 비물리적인 항목에서도 이루어 져야함
  - 또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조사·고증 결과를 해석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건당사자 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충분한 가치 공유 기반의 보전·활용 의사결정 방법
  - 사업추진주체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체계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문화재로 등록되는 경우 건축유산의 보수·정비 및 보전·활용 사업의 추진 근거가 생기므로,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의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 분석 대상

- 기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와 포지티브 헤리티지의 구분 없이 동일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음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갈등 사례 중에서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유산의 보전·활용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의사결정의 네 가지 논점에 따라 기존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함
- 본 연구의 1절에서 살펴본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갈등 사례 중에서 상암동 일본군 관사(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실패),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국가등록문화재 제71호, 등록문화재 존폐 논란), 아산 박정희 별장(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실패), 통영 해저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201호, 명칭변경 이슈), 제주 이승만 별장(국가등록문화재 제113호, 문화재 보수·정비실패, 문화재 보전·활용 실패)의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를 살펴봄
- 사례선정 기준은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갈등 요소 중에서 갈등 주체별 주장이 명확하고,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 보전·활용 논의의 경과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함

[표 3-5]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 검토 개요

주요 사례	네거티브 헤리티지 의사결정체계 주요 논점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보전·활용 가치	조사·고증·해석	가치 공유를 통한 의사결정
상암동 일본군 관사	●	●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신사	●	●		●
통영 해저터널			●	
아산 박정희 별장		●	●	
제주 이승만 별장	●	●		●

출처: 연구진 작성

■ 상암동 일본군 관사

-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 문화재청·SH공사를 중심으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었고, 지역주민은 초기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문화재 등록예고 단계에서 주민 반발 심화
-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
  - 근대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일제 강점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만 부각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과 의회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등 상암동 일본군 관사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표 3-6] 상암동 일본군 관사 보전·활용 논의 경과

논의 단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논의 경과
문화재등록 -가치판단 단계	- (2012.4.5.) 문화재위원회 등록예고 가결 - (2012.4.19.~5.18.) 등록예고* *예고결과: 지역주민의 반대
문화재등록 -등록예고단계	제출의견: 주변 서울일본인학교 학생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의 흔적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문화재등록 -문화재위원회 심의단계	- (2012.6.7.) 문화재 등록 보류* *심의결과: 지자체 의견수렴, 활용방안 주민설득 후 재심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일제강점기 수탈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일본군 관사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군인관사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당초 예고내용대로 등록하여 주민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2012.7.17.) 주민설명회 개최* *관사 관리예산 마포구의회에서 삭감조치 *문화재 등록에 대한 강한 거부감 표출 및 철거 요구
	- (2012.8.2.) 문화재 등록 보류* *문화재로서 보존가치는 충분하나 등록 반대의견이 있으니 주민설득을 통해 문화재로 등록 추진함

출처: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록, pp107-114.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pp16-22.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pp79-85.

## ■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신사

-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 당초 국립소록도병원과 문화재청은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의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고 근대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로 등록된 지 약 10년 뒤인 2013년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뒤늦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등장
  -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대표성과 파급을 감안한 폭 넓은 의사결정 참여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 직접적인 관계자 위주로 의사결정을 진행
-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
  - 국내 유일한 일본 신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대중들에게 밝혀지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등장함
  - 신사는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고유의 신앙 대상인 신 또는 국가에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sup>10)</sup>으로 일제 잔재의 보전·활용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한센인의 강제 신사참배 흔적으로 문화재 등록에 대한 대국민적 반감을 삼
  - 해당 시설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에 비해 신사라고 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떠올리게 되는 국민적 인식의 문제가 부각
- 충분한 가치 공유 기반의 의사결정
  -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전체의 공간적·역사적 가치에만 주목하여 신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 감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의 한계

10) 네이버 사전 . 신사(神社) 검색.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EC%8B%A0%EC%82%AC&query=%EC%8B%A0%EC%82%A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EC%8B%A0%EC%82%AC&query=%EC%8B%A0%EC%82%A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검색일: 2021년 6월 1일)



[그림 3-3]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소록도 신사의 철거-보존 논란을 보도한 카드뉴스 일부

출처: 연합뉴스. [카드뉴스] 소록도에 일제시대 강제 신사참배 흔적... 그대로 뒤야할까. 2017년 11월 11일자.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630818&memberNo=5246326&Type=VERTICAL> (검색일: 2021.05.21.)

[표 3-7]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 보전·활용 논의 경과

논의 단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논의 경과
문화재등록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10.10.~11.13.)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등 7건에 대한 문화재 등록 검토*</li> <li>*검토결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관련시설을 추가 조사 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과 일괄등록을 추진하도록 함</li> <li>- (2003.11.21.) 근대문화재 등록 예고 추진</li> <li>- (2003.12.8.~2004.1.7.) 등록 예고</li> <li>*예고결과: 등록 동의</li> <li>- (2004.1.16.) 문화재 등록 원안가결</li> </ul>
문화재 보수·정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5.27.~12.31.) 소록도 내 등록문화재 기록화 조사</li> <li>- (2013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신사 존폐 논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신사 철거 의견: 신사는 단순 시설물이 아닌, 일본 군국주의 정신의 상징터이므로, 남겨놓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철거하여야 함                 </div>

출처: 2003년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회의록.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1차 회의록.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8차 회의록.  
 2005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pp.897-899.  
 광주방송. 국내 유일 '日 신사' 존폐 논란. 2018년 3월 1일자.

■ 통영 해저터널

-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 및 해석
  - 유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사와 고증 단계를 수행한 이후, 통영 해저터널을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경칭인 ‘태합’을 포함한 통영태합굴 해저 도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표 3-8] 통영 해저터널 보전·활용 논의 경과

논의 단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논의 경과
문화재등록과정 -등록예고단계	- (2005.7.1.) 문화재위원회 등록예고 가결 - (2005.7.12.~8.10.) 등록예고, 명칭 변경 제안* *예고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칭인 ‘태합’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통영문화원: 통영해저터널로 명칭 변경 제안                          (재)통영총력사: 통영해저도로로 명칭 변경 제안                          이순우(개인): 통영해저터널 또는 통영해저도로로 명칭변경 제안                     </div>
문화재등록 -등록 및 고시 단계	- (2005.8.11.) 문화재청 설명자료 보도 - (2005.9.1.) 명칭변경 등록* *통영태합굴해저도로에서 통영해저터널로 명칭 변경

출처: 2005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pp.897-899.  
 문화재청 보도자료, 「통영해저터널」 문화재 등록예고 명칭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11일자.

■ 아산 박정희 별장

- 유산의 보존·활용 가치
  -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가 우선함으로써 건축물의 보존·활용 가치를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
-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 및 해석
  -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훼손 위기 문제가 먼저 부각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존 여부에 대한 갈등구조가 선행되었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고증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

[표 3-9] 아산 박정희 별장 보존·활용 논의 경과

논의 단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논의 경과
문화재 등록 논의 단계	- (2002)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박정희 별장 훼손위기, 문화재 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논란 - (2008·2009) 아산시, 박정희 별장 문화재 등록 신청 및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보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반대의견(일부 시민단체): 지자체가 시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인물과 관련된 박물관과 문화재 지정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함                          반대의견(김치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몇 번 다녀갔다고 해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                     </div> - (2016.06.01.)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새누리당)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화재 지정 필요성 제기, 이에 대한 찬반논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김응규 의원 주장: 별장에 박 전 대통령의 유품 100여점과 가족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지만, 현재 민간소유의 건물이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 경북도는 1993년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경북 기념물 제86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반대의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장을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div>

출처: 뉴시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산 별장 충남도 문화재 지정해야. 2016년 6월 1일자.  
 대전일보. 아산 박정희 별장 관광지화 논란. 2009년 1월 16일자.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이용 주택 문화재 지정 찬반 논란. 2002년 8월 6일자.

## ■ 제주 이승만 별장

-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 2004년 당시 이승만 별장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
  - 이후 제주시의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해당 유산의 활용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주 4·3사건 유족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채, 별장의 소유주인 (주)제주축산개발과 계획 내용을 일방적으로 논의
  - ‘이승만 기념관’으로 활용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주 4·3사건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아 복원·보수 공사만 진행함으로써 갈등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
- 유산의 보존·활용 가치
  - 건축물이 가지는 공간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채 이승만 별장이 부각되면서 제주 4·3사건 유족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증대



### ※ 국가등록문화재 제113호 제주 이승만별장<sup>11)</sup>

이 건물은 제주국립목장 안에 대통령과 국가 귀빈의 숙박을 위하여 지은 별장이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을 계기로 ‘이승만 별장’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두 가지 기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쌍희(囍)’자와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기원하는 회문 장식 등 우리나라의 의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1950년대 이후 나타나는 서구의 모더니즘 주택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충분한 가치 공유 기반의 의사결정
  - 문화재 등록이 선행되었고, 지자체에 의해 이승만 별장 종합정비계획으로서 기념관 조성 및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보존·활용 방안이 먼저 결정

11) 사진 및 텍스트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 이승만별장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441390113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4413901130000) (검색일: 2021.05.23.)

- 기념관 조성 및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이면서 해당 시설의 공간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방식에 대한 반발 발생

[표 3-10] 제주 이승만 별장 보전·활용 논의 경과

논의 단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논의 경과
문화재 등록 단계	- (2004.8.20.) 문화재위원회 등록 예고 가결 - (2004.9.4.) 문화재 등록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0.6.~12.) 제주시, 제주 이승만별장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용역목적: 이승만 별장은 제주에서 유일한 국가원수 관련 건축물로서, 현재 방치된 건물을 종합정비하여 역사문화 탐방지로 제공하고자 함
보전·활용사업 논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제주 이승만별장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과업의 내용                      - (역사관련 지침) 이승만과 제주4·3의 관계를 문헌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기념공간의 조성에 토대를 마련함                 </div> - (2011.3.) 제주시-(주)제주축산개발 재정비 협의* *협의내용: 현재 소유주가 토지매도에 동의하지 않고 건물 보수·복원에만 동의한 입장이며, 보수·보강 및 기반시설 10억 원, 기념관 조성 및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 - (2011.3.) 이승만 별장 재정비·활용 반대 논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제주시 입장: 소유주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여 별장 복원과 기념관 신축 등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                       4·3 유족 및 단체 입장: 이승만 전 대통령은 4·3학살의 책임자인 당시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도민정서에 크게 어긋남                 </div>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단계	- (2011.3.) 이승만 별장 기념관 건립 무산. 복원·보수공사만 진행 결정 - (2011.12.) 제주도의회, 별장 보수 지방비 전액 삭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이석문 의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단순히 4·3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4·3학살의 책임자. 굳이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으며, 4·3 유족들이 수용하지 못할 것                 </div> - (2013) 이승만 별장 정비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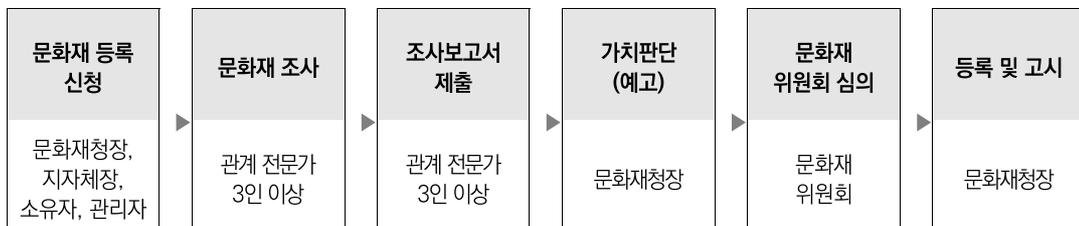
출처: 경향신문. 이승만 별장 관광자원화. 2010년 5월 2일자.  
 제주시청. 제주 이승만별장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제주: 제주시청.  
 뉴시스.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4·3단체 "납득 못해". 2011년 3월 2일자.

논의 단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논의 경과
	뉴시스. 제주시 이승만 별장 기념관 건립 “없던 일로”. 2011년 3월 11일자. 아시아투데이. 제주시, ‘이승만 전 대통령 제주별장’ 정비 착수. 2013년 12월 10일자. 한겨레. 제주 이승만 별장 보수 ‘제동’. 2011년 12월 14일자.

### 3. 주요 갈등 사례에서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한계

#### ■ 제한적인 의사결정 참여 주체 범위

- 일부 관계자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해당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비극을 경험한 당사자, 유족, 그 외 사건과 관련된 집합기억을 고유하는 대중들이 존재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문화재로 지정·등록하거나, 보전·활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사업추진에 실패한 기존 의사결정체계의 한계가 있음
- 사건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등록문화재 제도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문화재 등록을 결정하는 과정 또한, 의사결정 주체 범위의 한계가 있음
  - 특히, 문화재 등록여부는 해당 분과의 문화재위원회의에서 결정되므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청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그림 3-4]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출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 살펴본 사례들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경우 유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상암동 일본군 관사뿐이었음
- 하지만 상암동 일본군 관사 갈등 사례 또한, 문화재 등록대상 선정·조사·가치판단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다가 문화재 등록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제기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해당 유산의 보전·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전(全)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제주 이승만 별장의 경우 제주시가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종합정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후 해당 유산의 활용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주 4·3사건 유족 및 관련 전문가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별장의 소유주인 (주)제주축산개발과 계획 내용을 일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승만 기념관’으로 활용 용도를 결정한 과정에서도 사건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충분한 조사·고증·해석을 통한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 논의 단계의 부재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조사·고증 및 해석에 대한 주의 필요
  - 아산 박정희 별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존 논의가 우선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통영 해저터널의 경우 유산의 명칭에 대한 성실한 조사·고증이 수행되었지만,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경칭인 ‘태합’을 포함한 통영태합굴 해저 도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 문제는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치조사와 해석이 전문가 3인에 의해 수행되면,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치를 판단<sup>12)</sup>하고 있어 제한적인 의사결정 참여주체의 범위와도 긴밀하게 연결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제2항; 제3항; 제5항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일제 잔재 보전·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산해야 할 과거의 잔재로 인식되어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
  - 상암동 일본군 관사, 고흥 소록도갱생원 신사는 한센인의 강제 신사참배 흔적으로 문화재 등록에 대한 대국민적 반감을 삼

1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유산화 되는 것에 대한 반감
  - 아산 박정희 별장, 제주 이승만 별장 또한 사건당사자와 유족, 지역주민, 시민단체로부터 해당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음
  - 두 사례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채 유산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보전·활용을 추진함

#### ■ 일방적인 보전·활용 결정 방식

-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보전·활용 의사결정
  - 정책관계자 및 사업추진주체의 일방적인 보전·활용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해당 유산의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음
- 일방적인 보전·활용 추진 근거가 되는 등록문화재 제도
  - 특히 고흥 구 소록도 갯생원 신사와 제주 이승만 별장 모두 문화재 등록단계가 아닌, 유산의 정비·보전·활용 단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됨
  - 그 이유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등록 신청 단계부터 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방적으로 문화재 등록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문화재로 등록한 경우 해당 유산의 보수·정비 및 보전·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음

## IV 결론

### 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기본 방향

[표 3-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의 기본 방향

#### 1. (의사결정자) 정책 의사결정 주체의 범위 확대

- 사건당사자 등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주체 확대
- 의사결정 참여자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필요

#### 2. (문제진단)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을 고려한 가치 논의
  - 특징1: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건축)유산
  - 특징2: 사건당사자 및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의 존재
  - 특징3: 가치판단의 복잡성
  - 특징4: 보편적인 가치 개념으로 치환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
- 확대된 참여주체와 함께 유산의 보전·활용가치 논의

#### 3. (자료수집·분석)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 및 해석

-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고증
- 미래지향적인 유산의 해석

#### 4. (대안선정) 유연한 보전·활용 의사결정 방식

- 일방적인 보전·활용 결정방식 지양
-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경우 사업추진 보류 및 재검토 단계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 의사결정 주체의 범위 확대

- 사건당사자 등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주체 확대
  - 기존 의사결정체계의 경우 정책 관계자와 일부 전문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건당사자, 유족 또는 불편한 역사적 기억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대중들과 관련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 참여자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필요
  - 의사결정의 참여주체는 각각의 유산과 관련된 사건, 인물, 지역 등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주체를 조사하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을 고려한 가치 논의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건축물 자체의 보전 가치도 중요하지만,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 기억과 후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는 가치 또한 중요함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유산의 건축적·역사적·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확대된 참여주체와 함께 유산의 보전·활용가치 논의
  -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유산의 가치와 교훈을 발굴하는 과정은 확대된 의사결정 주체와 함께 논의 되어야 함

### ■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 및 해석

-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고증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역사 고증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조사·연구·역사고증 단계는 해당 유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함
- 미래지향적인 유산의 해석
  - 유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통해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사건당사자 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또한 필요함

### ■ 유연한 보전·활용 의사결정 방식

- 일방적인 보전·활용 결정방식 지양
  - 기존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자들과 충분한 가치 논의를 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 방식 필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해당 유산의 무조건적인 보전·활용이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이루어 졌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함
-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경우 사업추진 보류 및 재검토 필요
  - 건축유산으로써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보전·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 보류 및 재검토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 필요



[그림 4-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의 기본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 2. 연구 요약 및 의의

### ■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과 특징 검토

-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유사 용어의 의미와 범주를 살펴보았으며, 이 외에도 다크 투어리즘, 기억산업, 장소기억, 기억 경관 등 유사 개념을 함께 비교·조사하여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을 설명함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존·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비극과 부정적인 기억들이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가시화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유산’으로 정의함
  - 다음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국문 표현을 제기하기 위해 문화유산학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수행하였고, 회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국문 번역 없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 특징
  -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를 정리하였고, 해당 사례들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①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 비극과 관련된 유산, ② 유산과 관련된 사건당사자와 집합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들이 존재하는 유산, ③가치 판단이 복잡한 유산, ④보편적인 가치 개념으로 치환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경향이라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은 특징은 포지티브 헤리티지와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며, 기존의 포지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의사결정체계와는 차별화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 기존 보존·활용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 검토

-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현안 분석
  - 기존 의사결정체계 내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존·활용을 결정하는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보고서, 연구자료, 문화재청 내부자료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①유산에 대한 조사·고증 및 해석과 관련한 문제, ②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 ③일방적인 보존·활용 결정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의사결정체계 분석을 위한 주요 논점 마련
  -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에 대한 갈등 사례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함
  - 의사결정체계 분석을 위해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존·활용 사례의 현안 분석 및 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를 ‘의사결정자,’ ‘문제진단(인식),’ ‘자료수집·분석’ 및 ‘대안 선정’ 4가지로 정리함
  -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 ‘유산의 보존·활용 가치,’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고증 및 해석,’ ‘충분한 가치공유 기반의 의사결정’ 네 가지 의사결정의 주요 논점을 도출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함
- 주요 사례별 의사결정 문제점 및 한계 도출
  - 각 사례별 보존·활용 논의의 경과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언론보도 자료, 관련 보고서, 연구자료 및 지자체별 내부자료 등을 검토함
  - 그 결과 기존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은 ‘제한적인 의사결정 참여 주체 범위,’ ‘충분한 조사·고증·해석을 통한 유산의 보존·활용 가치 논의 단계의 부재,’ ‘일방적인 보존·활용 결정 방식’으로 도출됨

## ■ 의사결정체계 기본방안 마련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방향 도출
  - 본 연구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과 특징을 확인하고, 포지티브 헤리티지와는 차별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의사결정체계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갈등 양상과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4장에서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방향을 도출함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에서는 가장 먼저 보전·활용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조사하는 기초조사 단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참여주체를 확대하여야 함
  - 다음으로 확대된 의사결정 참여주체와 함께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조사·연구·고증, 해당 유산의 가치 발굴, 해당 유산의 보전·활용 결정 및 보전·활용방안 기획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한 조사·연구·역사고증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산의 가치판단과 보전·활용 결정이 논의되어야 하며, 보전·활용 결정단계에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유산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보전·활용 사업을 재논의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 또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유산이 보전·활용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방식을 결정하였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임을 제언하고자 함

### 3. 향후 연구과제 도출

#### ■ 의사결정체계의 구체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분석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체계의 기본방향과 기존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관련한 기초조사, 논의과정, 갈등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여건 등을 감안 하면서 관련 의사결정주체의 범위와 주체별 입장, 갈등양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갈등발생의 원인과 원활한 의사결정 및 합의형성을 위한 방법론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필요

- 본 연구에서 등록문화제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사결정체계 기본 방향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 다크 투어리즘 등 보전·활용 사례에 대한 평가

- 제주 4.3 관련 유산, 인천 및 포항 등의 일제강점기 관련 유산 등 지역 관광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현재 목표한 성과 목표가 적절하였는지, 성과목표 및 추진방안에 따라 진행 되고 있는 지, 현재의 보전·활용 방식에 대한 갈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바람직한 보전·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체 차원의 정책방안과 함께 조사-계획 수립-사업 시행-운영 및 평가의 일련의 시행 과정에서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가치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방법론 필요**

-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해당 유산이 가지고 있는 보전과 활용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범용적인 기준이 아닌 해당 유산의 특성 및 관련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보전·활용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결정체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조정·확정하는 절차와 연계하는 체계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연구자료

- 강동진·배연한. 2017. 근대관련 세계유산의 등재 경향 분석. 國土計劃, 52(5). 47-67.
- 강동진. 2020. 근대기 세계유산에 대한 판단.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서울: (사)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김미진. 2018.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충남금융조합연합회 회관을 사례로.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섭. 2018. 한국에서의 문화유산 개념 확장 경향과 특징 분석: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5(3). 49-70.
-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 50년사(자료편).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3. 등록문화재 테마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4.6.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문화재청 내부자료.
- 문화재청. 2015.4.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문화재청 내부자료.
- 손은신·배정환. 2018.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 -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 한국조경학회지, 46(4). 21-35.
- 손은신. 2021.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석기 외. 2019. 일제강점기 형성 유산(건축물)의 가치 정립 및 보존·활용 방안 연구. 문화재청.
- 오은정. 2020. 파괴의 보존: 유네스코 세계유산 히로시마 원폭 돔의 보존과 '평화'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53(1). 47-97.
- 우양호. 2020. 동아시아 해항도시(海港都市)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싱가포르와 부산의 활용방식 비교.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53-83.
- 이민경. 2020.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정적 문화유산과 다크 투어리즘의 기억-테즈메이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0(43). 193-230.

- 이세훈. 2018. 제주 지역 태평양전쟁 유적의 부존 및 활용방안,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이현경. 2018.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20. 163-192.
- 이현경. 2020. 과정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서울: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이현준·김왕직. 2016. 도서지역 태평양전쟁유적의 유형별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추계). 181-188.
- 임석재. 1991. 意思決定에 關한 理論的 考察(I). 關大論文集, 19(1). 51-63.
- 장성곤·강동진. 2017.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63-80.
- 장준영. 2005. 교사들의 학교경영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유형에 따른 장학실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재호. 2020.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反日)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6(3). 101-131.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 정수진. 2020. 식민지 유산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71. 187-217.
- 정철현. 2001. 행정의사결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 제주시청. 제주 이승만별장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제주: 제주시청.
- 조태환·김태영. 2018. 한국 전쟁 군사유적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중부접경지역(연천군, 철원군, 화천군)을 중심으로-. 농촌건축, 20(3), 47-56.
- 한숙영·조광익. 2010. 현대사회에서 위협과 관광. 관광학연구, 34(9). 11-31.
- 한정선. 2017. 군함도, 산업유산과 지옥관광 사이에서. 역사비평, 121. 281-313.
- 한지은. 2015. 전장에서 관광지로-동아시아의 기억산업. 문화역사지리, 27(2). 55-78.
- Aleida Assmann. 2009. Erinnerungsraum: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4th edition, Munchen: Verlag C.H.Beck oHG, 변학수·채연숙 옮김. 2011.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 Andreas Huyssen. 1995. Twilight Memories: Marking Time in a Culture of Amnesia, Routledge.

- Dylan Trigg. 2009. The Place of Trauma: Memory, Hauntings, and the Temporality of Ruins, *Memory Studies* 2(1): 87-101.
- Gary Cross. 2015. *Consumed Nostalgia: Memory in the age of Fast Capit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 Lynn Meskell. 2002.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75, No. 3.

## ■ 보도 자료

경인일보. 2020년 10월 30일자. 안양 구(舊) 서이면사무소, 경기도문화재자료 현재 지위 유지.

경향신문. 2010년 5월 2일자. 이승만 별장 관광자원화.

경향신문. 2021년 2월 16일자. 위안부 문제, 내가 매듭짓고 싶어.

광주방송. 2018년 3월 1일자. 국내 유일 '日 신사' 존폐 논란.

국민일보. 2012년 1월 2일자. 국가문화재 '이승만 별장' 어쩌나... 제주도의회 보수 예산 깎둑.

뉴스원. 2021년 1월 31일자.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3주만에 5132명 접수.

뉴시스. 2011년 3월 2일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4·3단체 "납득 못해".

뉴시스. 2011년 3월 11일자. 제주시 이승만 별장 기념관 건립 "없던 일로".

뉴시스. 2016년 6월 1일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산 별장 충남도 문화재 지정해야.

뉴시스. 2020년 11월 24일자. 5·18단체 "전두환 동상 철거 등 요구 미수용시 직접 철거할 것"

대전일보. 2009년 1월 16일자. 아산 박정희 별장 관광지화 논란.

동아일보. 2020년 3월 12일자. 문화재청, 6·25전쟁-4·19혁명 관련 유물 올해 본격 발굴 나선다.

매일경제. 2005년 2월 24일자. 통영시, 일제때 건물 문화유산 등록 반발.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5년 8월 11일자. 「통영해저터널」 문화재 등록예고 명칭과 관련 하여.

부산일보. 2014년 5월 13일자. 일제 잔재 논란 '옛 송정역' 문화재 유지.

서울경제. 2015년 3월 25일자. [역사의 향기] <96> 상암동 일본군 관사.

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10일자. 제주시, '이승만 전 대통령 제주별장' 정비 착수.

연합뉴스. 2002년 8월 6일자. 박정희 전 대통령 이용 주택 문화재 지정 찬반 논란.

연합뉴스. 2017년 11월 11일자. [카드뉴스] 소록도에 일제시대 강제 신사참배 흔적...그 대로 뒤야할까.

연합뉴스. 2018년 8월 14일자. '친일 잔재' 안양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존치 놓고 이견.

연합뉴스. 2019년 12월 11일자. 전국에 널린 일제 수탈의 유적... '보존 vs 철거'

연합뉴스. 2020년 8월 13일자. [광복 75년] ④ 일제 유적 '철거 vs 보존' 논란... 일부선 다  
크투어리즘 활용

연합뉴스. 2021년 1월 27일자. 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운명은...보존-철거 갈팡질팡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2일자. 일제강점기 소설가 '지하련' 주택, 철거냐 보존이냐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제주 이승만 별장 보수 '제동'.

한겨레21. 2020년 4월 27일자. 친일 유적 버릴까 지킬까

해럴드경제. 2017년 7월 26일자. "귀신섬, 감옥섬이었다" '군함도' 시사회서 생존자 증  
언.

KBS. 2020년 10월 7일자. 철거 vs 복원 논란 '조선식산은행' 존치

## ■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 ■ 회의록

2003년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회의록.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1차 회의록.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제8차 회의록.  
2005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록.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 ■ 자치 법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다크 투어리즘 검색.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761527&sense\\_no=828613&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761527&sense_no=828613&viewType=confirm)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네이버 사전 . 신사(神社) 검색.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EC%8B%A0%EC%82%AC&query=%EC%8B%A0%EC%82%A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EC%8B%A0%EC%82%AC&query=%EC%8B%A0%EC%82%A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검색일: 2021년 6월 1일)

네이버 지식백과. 군함도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498&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1.5.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구서이면사무소 검색.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region=2&searchCondition=%EC%84%9C%EC%9D%B4%EB%A9%B4%EC%82%AC%EB%AC%B4%EC%86%8C&searchCondition2=&s\\_kdcd=00&s\\_ctcd=00&ccbaLcto=&ccbaKdcd=&ccbaAsno=&ccbaCtcd=&ccbaCpno=&ccbaCndt=&stCcbaAsno=&endCcbaAsno=&stCcbaAsdt=&endCcbaAsdt=&ccbaPcd1=&culPageNo=1&chGubun=&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gbn=3&pageNo=1\\_1\\_2\\_0](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region=2&searchCondition=%EC%84%9C%EC%9D%B4%EB%A9%B4%EC%82%AC%EB%AC%B4%EC%86%8C&searchCondition2=&s_kdcd=00&s_ctcd=00&ccbaLcto=&ccbaKdcd=&ccbaAsno=&ccbaCtcd=&ccbaCpno=&ccbaCndt=&stCcbaAsno=&endCcbaAsno=&stCcbaAsdt=&endCcbaAsdt=&ccbaPcd1=&culPageNo=1&chGubun=&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gbn=3&pageNo=1_1_2_0) (검색일: 2021년 5월 16일)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 이승만별장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_1&ccbaCpno=441390113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4413901130000) (검색일: 2021.05.23.)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기념관 소개 페이지.

<https://dhrm.or.kr/intro> (검색일: 2021.02.21.)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 검색.

<https://heritage.unesco.or.kr/%ec%95%84%ec%9a%b0%ec%8a%88%eb>

%b9%84%ec%b8%a0-%eb%b9%84%eb%a5%b4%ec%bc%80%eb%82%98%  
ec%9a%b0-%eb%8f%85%ec%9d%bc-%eb%82%98%ec%b9%98-%ea%b0%  
95%ec%a0%9c-%ec%88%98%ec%9a%a9%ec%86%8c-%eb%b0%8f/ (검색  
일: 2021.05.23.)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장, 조선 및 탄광 검색.

<https://heritage.unesco.or.kr/%ec%9d%bc%eb%b3%b8%ec%9d%98-%eb%a9%94%ec%9d%b4%ec%a7%80-%ec%82%b0%ec%97%85%ed%98%81%eb%aa%85-%ec%9c%a0%ec%82%b0-%ec%b2%a0%ea%b0%95-%ec%a1%b0%ec%84%a0-%eb%b0%8f-%ed%83%84%ea%b4%91/> (검색일: 2021.05.23.)

## 부록: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논란 관련 보도자료 조사

일자	기사 제목	언론사
<b>제주 이승만별장 (국가등록문화재 제113호)</b>		
2014.03.27.	등록문화재 '이승만 대통령 제주별장' 새단장	연합뉴스
2014.01.09.	이승만 별장, 준공하고도 '개방 여부' 논란	경향신문
2012.01.02.	국가문화재 '이승만 별장' 어찌나... 다 쓰러져 가는데, 제주도의회 보수 예산 싹둑	국민일보
2011.03.11.	제주시 이승만 별장 기념관 건립 "없던 일로"	NEWSIS
2011.03.08.	"4.3 집단 학살자 이승만에 기념관, 절대 안된다"	헤드라인제주
<b>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b>		
2017.02.05.	[주목! 이 조례] 피란수도 부산 유산 보존 조례	연합뉴스
2016.12.19.	한국전쟁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유네스코 등재 추진	헤럴드경제
2009.05.19.	부산 임시수도청사 박물관으로 재탄생	연합뉴스
2002.09.13.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문화재 등록	연합뉴스
2001.12.13.	부산 옛 법조청사 본관 문화재 지정 추진 논란	국민일보
<b>고흥 구 소록도 갯생원 신사 (국가등록문화재 제71호)</b>		
2017.11.11.	소록도에 일제시대 강제 신사참배 흔적...그대로 뒹아할까	연합뉴스
2014.08.10.	"소록도 한센인 1/3은 '작대기부대'였지"	오마이뉴스
2013.05.22.	국내 유일 '소록도 日 신사' 존폐 논란	문화일보
<b>통영 문화동 배수시설 (국가등록문화재 제150호)</b>		
2016.10.18.	통영 철거위기 근대건축물 보존길 '활짝'	국제신문
2005.02.25.	문화유산이나 일제잔재냐	부산일보사
2005.02.24.	통영시, 일제때 건물 문화유산 등록 반발	연합뉴스
<b>통영 해저터널 (국가등록문화재 제201호)</b>		
2005.08.12.	통영 해저도로 명칭 '통영해저터널'로 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08.11.	문화재청 '통영태합굴' 일본식 명칭에 사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08.10.	[밀물썰물] 통영해저터널	부산일보사
2005.08.09.	통영해저터널 명칭 도요토미 히데요시 경칭 사용	문화일보
2005.08.08.	"'통영해저터널'로 불러주세요"	연합뉴스
<b>부산 송정역 (국가등록문화재 제302호)</b>		
2014.05.13.	일제 잔재 논란 '옛 송정역' 문화재 유지	부산일보

일자	기사 제목	언론사
2006.12.06.	부산 송정역 문화재 지정	연합뉴스
2006.09.28.	송정역 등 간이역 12곳 근대문화재 등록 예고	부산일보
<b>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국가등록문화재 제683호)</b>		
2016.11.28.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복원해야 할까?	충청일보
2016.11.28.	충주 옛 조선식산은행 건물 복원 공청회 찬반 '팽팽'	연합뉴스
2016.11.21.	복원? 철거?...충북 충주시 80년된 일제건물 활용 시민의견 묻는다	경향신문
2016.11.21.	충주시 조선식산은행 복원 주민공청회	국제뉴스
2016.11.21.	충주 옛 조선식산은행 건물 "철거냐 복원이나"	NEWSIS
<b>서울 신당동박정희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제412호)</b>		
2013.03.29.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 기념공간 조성 추진	연합뉴스
2009.12.24.	이화장 등 역대 정부수반 유적 정비·복원된다	NewDaily
2008.10.09.	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 문화재 등록	연합뉴스
2008.08.08.	'박정희·최규하 사저' 문화재 된다	문화일보
<b>포항 구룡포 일식가옥 5개동</b>		
2011.08.15.	일제 잔재 관광자원화 찬·반 논란	서울Pn
2009.06.18.	포항시, 일본인 가옥 보수 복원 사업 역사 왜곡한다는 논란 거세	NEWSIS
2009.02.24.	구룡포 일본식 주택, 문화재 등록지정 '보류'	매일신문
<b>서울 상암동 구 일본군 관사</b>		
2017.10.25	[단독] 서울 상암동 옛 일본군관사 앞에 '소녀상' 세워진다	CNB뉴스
2014.08.18.	상암동 주택가 한복판 일본군 관사, 문화재일까?	이투데이
2013.07.09.	[단독]서울 한복판 '일본군 관사' 4년째 흉물방치 '왜'	CNB뉴스
2012.10.22.	일제강점기 일본군 관사도 문화재?	동아일보
2011.09.20.	[국감 초점]"의친왕궁은 주차장,日光교관사는 문화재?"	NEWSIS
<b>최남선 고택</b>		
2003.01.10.	최남선 고택 문화재 지정 제외	연합뉴스
2003.01.10.	[수도권] 최남선 고택 철거 위기...서울시 "친일활동 장소"	동아일보
2002.11.29.	최남선 우이동 옛집 보존 논란	동아일보
<b>인천 부윤관사</b>		
2020.09.20.	부윤관사·인천항 갑문...시 등록문화재 1호는?	인천일보
2020.08.18.	인천 역사연구 시 '역사자료관' 새 보금자리가 하필 적산가옥?	기호일보
2019.07.15.	근대유산 부윤관사, 인천시 지정문화재 등록 추진	충부일보
2019.03.22.	인천 근대 건축유산 밀집 '관사마을' 철거 위기	한겨레

일자	기사 제목	언론사
2019.03.20.	근대건축물 준비한 인천 관사마을 옆 고층 아파트 건축 논란	연합뉴스
<b>청주 시청사 본관</b>		
2020.02.10.	청주시 청사 본관 4층 철거 후 활용, 어떻게...문화재되나?	NEWSIS
2019.12.01.	청주시, 본관 등록문화재 신청 2021년 설계 완료 이후 검토	NEWSIS
2019.03.27.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철거 소모적 논쟁 끝내야	대전일보
2019.03.20.	청주시의원, 등록문화재 추진 "본관 철거" 또 제기	NEWSIS
2018.10.17.	청주시청사 본관 보존 가닥...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재권고	NEWS1
<b>아산 박정희 별장</b>		
2016.06.01.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산 별장 충남도 문화재 지정해야"	NEWSIS
2008.06.11.	아산, 박정희 前대통령 별장 문화재 추진	대전일보
2002.08.06.	박정희 전 대통령 이용 주택 문화재 지정 찬반 논란	연합뉴스
<b>구 서이면 사무소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b>		
2021.04.28.	안양1번가 생뚱맞은 문화재에 이런 속사정이	오마이뉴스
2020.11.08.	도의회 문체위 "친일잔재 서이면사무소, 도문화재 지정 해제" 지적	경기일보
2020.10.30.	안양 구(舊) 서이면사무소, 경기도문화재자료 현재 지위 유지	경인일보
2020.10.28.	[영상]안양 서이면사무소 존폐 논란·친일 잔재 vs 역사교육 산물	노컷뉴스
2019.06.19.	친일 들통난 옛 서이면사무소... 헐어? 말아?	서울신문
<b>구 목포 일본영사관 (사적 제289호)</b>		
2021.01.20.	목포, 일제 강점기 관공서에 '단죄비' 설치 여부 놓고 논란	서울신문
<b>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b>		
2021.01.20.	목포, 일제 강점기 관공서에 '단죄비' 설치 여부 놓고 논란	서울신문
2020.06.03.	목포문화연대, 일제 잔재 단죄비 건립 추진	전남일보
2020.06.03.	목포문화연대, 일제 잔재 단죄비 건립 추진	전남일보
1999.08.26.	구(舊) 동양척식 목포지점 보존 여론	연합뉴스
<b>박제봉 고택</b>		
2021.03.25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아닌 단죄비 세워야"	인천일보
<b>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 (국가등록문화재 제87호)</b>		
2019.10.30	친일 인사 가옥 3억 들어 보수... 친일 행적은 기록 안해	오마이뉴스
<b>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b>		
2021.05.07.	인천 캠프마켓 내 일제 잔재 건물 철거 논란	OBS뉴스
<b>박진경 대령 동상</b>		
2021.04.13.	"4.3 학살 주범 박진경, 대표위패 박탈하고 단죄비 세워야"	오마이뉴스